새만금 예산 삭감 이유 정당한가?

정부 "긴축재정 기조 영향 · 사업별 집행률 고려" 변명 옹색
김만기 도의원, "기업유치 · 사업 지연, 추가비용 상당 우려"
김 지사 "예산 삭감 이유 납득 어려워… 정상화 위해 총력"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20일 진행된 제404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폭거 사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도의 피해 상황과 이번 사태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34년 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 추진 과정이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들어 개발의 속도가 나기 시작하며 개발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현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또 다시 표류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의 영향과 사업별 집행률 및 추진상황을 고려했다고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고, 이후에는 뜬금없이 새만금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하며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핑계로 삼고 있다.

하지만 김만기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표면적 이유 어느 것 하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 역시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밝힌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삭감이라는 결론하에 짜맞추기식 이유를 내세운 것 같다"고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 삭감에 따라 기반 시설들이 적기에 들어서지 못하면 최근 탄력을 받기 시작한 새만금지역 내 기업유치 및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하며, 현재 추정되고 있는 피해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부정적 이슈로 기업들의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예산 삭감 영향으로 투자를 철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답변하며, 다만 "도로, 공항, 항만 등 새만금 기반시설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각종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신항만이나 가력선착장 확장, 수목원 사업 등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용이 상당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설물 관리 및 안전상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전북도에서 추산하고 있는 예산 삭감에 따른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라 판단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일부 새만금 기반 시설은 본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기투자된 공사 현장에서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만금신항과 가력선착장 확장 공사는 후속 공정이 지연될 경우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 등으로 연 95억원 정도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추산되고, 해상 공사 특성상 기 조성된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까지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폭거 사태에 대해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일은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강조하며, "도지사로서 모든 역량을 쏟고 도민과 정치권의 의지를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도의회 전북특자도 지원 특위, 업무보고 청취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상황 · 특례 발굴 관련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주요 특례 반영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태창 위원장(군산1)은 재정 특례 등 대표적인 전북특별법 2차 특례 발굴 내용에 관해 질의했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하여 자치제도 및 행정서비스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도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질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중앙부처에서 수용불가 입장인 특례 조항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 역량을 결집하여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각 분야별 특례 조항이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특별자치도와 차별되는 새만금, 농생명 등에 관련된 특례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으며 잼버리 사태 등으로 인한 입법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보다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도민공감 형성을 위한 홍보추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발굴된 특례를 입법화한 내용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재생에너지 등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려 특색있는 특례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서해 해양관리연구소 설립 국회단계 예산확보 절실"

민주 이원택 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25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하는 '서해안권 해양관리 연구센터 건립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이 절실하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 · 부안)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전국 해역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거점 연구소가 있지만 유독 서해안권 거점 연구소만 없어, 서해안 권역 해양연구 공백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서해안 연구 특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2021년 6~12월)' 용역을 통해, 2025년까지 '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가칭)'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 20억원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원택 의원은 "서해권역 해양 연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원 '서해안권 해양관리 연구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연구 결과 (가칭)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총 43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총 151억원, 일자리 창출효과 총 2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김석진 기자

V-Pass 고의로 끄는 등 미작동 · 미신고 사례 잇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민주 윤준병 의원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324건에 달해"

바다 위의 하이패스로 불리는 어선위치발신장치 V-Pass를 도입하면서 어선들의 자동 출·입항 신고는 물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 구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어선들이 이 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고장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현황'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 AIS 포함)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이 났음에도 신고하지 하지 않아 단속된 어선은 2018년 이후 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법' 제5조의 2에 따라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2억2,660만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같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단속된 어선도 10척(과태료 3,564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박 내 부착된 V-Pass 등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선박의 위치가 자동 전송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이 났음에도 신고하지 하지 않아 적발된 어선만 300척이 넘고, 이 따른 과태료는 2억 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평균 1건당 과태료는 70만원에 불과해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업 중 조난당하는 경우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수색 및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선관위, 정당 업무협의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선거관리위원회 3층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정당들이 선거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거법과 선거절차 과정을 안내했다. 또한 선관위는 정당들이 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함으로써 내년 선거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다음달까지 등록된 14개 정당 도당사무소를 모두 방문하여 정당 · 정치자금 사무 등 실무를 지원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유보통합 사전준비 철저"

김명지 도의원,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 · 돌봄 서비스 제공 위해 준비해야"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11 ·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제40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일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악재에 휘말려 제대로 치러지지 못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현 정부의 무능력을 타산지석 삼아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유보통합' 만큼은 철저히 준비하자"고 사전 협업을 촉구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돼 28년간 끌어온 유보통합 논쟁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영유아 교육 · 보육 체제가 붕괴할 상황에 놓인 현실에서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 5년만 지나도 영유아 수의 1/3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명지 의원은 서거석 교육감을 향해 "현재 인구 절벽, 학령인구 격감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절차와 형식 없이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그리고 유보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영유아 교육 · 보육의 일원화 수단임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통해 추가 재원을 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면서 "지난해 정기국회 내내 초중등 예산을 대학으로 전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부추기더니 같은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보통합 추진 비용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라면서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되며, 별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 ·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예산 조달 계획은 유보통합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유보통합이 이뤄져 단일한 유아교육 체제를 마련하더라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에게는 도내 어린이집과 관련해 유보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명지 의원은 "지난 2013년 도내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수 5만9,050명에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2만8,279명으로 10년 동안 약 48%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집 수는 2013년에 1,647개소에서 올해 4월 1일 기준 975개로 10년 동안 40여 %가 감소했다"라면서 '보육 인프라' 심각성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그는 "저출생 인구 절벽의 위기에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우선적인 과제"라면서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 · 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유보통합은 매우 중요하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를 교육청과 함께 협업해 해결해 나가라"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서비스를 향상 · 제공하는 실질적인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 이후의 재정지원 체계는 도와 교육청 간 연계 · 협력 강화와 함께 영유아 보육업무에 대한 권한 · 책임, 인력과 재원 등 역시 사전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와 도내 각 시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10대 정책' 방향과 '관리체계 추진 방안'을 전북교육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김관영 지사는 "영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유보통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안내

농지시장 안정화 및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

농지 매입

➢ 매입대상자
·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매입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1필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
➢ 매입가격 : 감정평가액

매입농지 임대

➢ 임대대상자
· 신규임대 : 전업농육성대상자
· 재 임 대 : 기존 임차인 희망시 계속해서 재임대 가능
➢ 임대 기간 : 5년(5년 단위로 재임대 가능)
➢ 임대 가격 : 공사에서 정한 임대차료 상한 범위 내 협의가격
➢ 임대 조건 : 5년간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의 80% 감면 혜택
- 휴경시 임대료 80% 감면 혜택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 063) 530-0313